

검찰, '백남기 사망' 경찰 4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 전 청장과 서울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속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접 물을 뿌린(직사살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경장의 경우 중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 경인 사거리에서 경찰이 쓴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백씨가 쓰러지고 2015년 11월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2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위생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및 부분 직사 금지 등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진료기록 감점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백씨 유가족들이 불법의혹을 제기한 ▲차벽 설치 ▲살수차 법적근거 ▲취역액 혼합살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허가 ▲혼합살수의 법적근거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직사살수 형식적 실제적 요건·절차 준수 여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직사살수사 수압 제한규정 초과 여부와 부상자 구호조치의무 해태 여부는 '중거부족'으로 결론내렸고, '가슴 이하 겨냥' 지침위반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

고소장 23개월 만에 수사 결과 발표 관련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강신명 전 청장, 무혐의 불기소 처분

지휘관인 신 단장은 현장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만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단장은 검찰조사에서 구 전 청장의 지휘에 대해 '머리 겨냥 살수 금지 등에 대한 주의 촉구'를 했다던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살수요원 최 경장, 한 경장은 현장상황에 따라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위에 직접 물을 뿌려 두개골 골절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빗줄을 당기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약 2800rpm 고압으로 약 13초 가량 직접 물을 뿌렸으며, 백남기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했다.

이들은 살수차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조이스틱 좌우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수차는 살수압 3000rpm 제어 장치 고장으로 그 이상도 살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검찰은 강 전 경찰청장의 경우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프랑스, 범죄 저지른 불체자 무조건 추방

프랑스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미등록 외국인을 무조건 추방하기로 했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테러가 발생하자 내 놓은 조치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불체자 범죄와 관련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부 리옹에서 불법 체류 중인 튀니지 남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일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의 범인인 아흐메드 하나치는 범행 이틀 전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음날 일단 풀려났다. 그는 마약과 일괄 중독, 경범죄 전력으로 이미 경찰에 잡혀진 인물이었다.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이번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치는 수사 당국의 이슬람 급진주의자 감시 명단에는 올라있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 감시단은 미등록된 외국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또 하나치 석방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소말리아, 사상 최악 폭탄테러 수습에 분투

사상 최악의 폭탄테러를 겪은 소말리아가 그 여파를 수습하는 데 분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소말리아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연쇄 트럭 폭탄 테러로 최소 276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다쳤다. 공식적인 실종자 수는 수십명으로 집계됐지만 알자지라는 그 수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구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알다리만 오마르 오스만 소말리아 정부부 장관은 알자지라에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가디슈의 장비로는 건물 잔해를 전부 치우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과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또 "부상자 중 일부는 소말리아에서 어려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터키가 도움 요청에 응답해 이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부상자 35명이 군 구급용 항공기로 터키 앙카라로 이송되기도 했다.

모가디슈 시내에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아 헤매는 남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있다.

48시간 동안 형과 연락이 닿지 않은 압디아즈 오마르 이브라힘은 모가디슈의 병원 뿐 아니라 맨손으로 건물 잔해까지 뒤지며 형을 찾고 있다.

영국서 태풍 '오펜리아' 위력 붉은 태양 현상

16일(현지시간) 태풍 '오펜리아'(Ophelia)가 아일랜드를 강타하면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영국에서는 대낮에 붉은 태양이 뜨는 기현상이 관측됐다.

인디펜던트,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펜리아가 시간당 풍속 190km의 강풍을 몰고 아일랜드에 상륙했다.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강력한 비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나무가 차량 위로 쓰러져 5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달아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다. 곳곳에서 전기줄이 망가지면서 3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다.

오펜리아는 아일랜드를 덮친 뒤 강한 비바람을 품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남중부, 잉글랜드 북부, 웨일스 북서부 등이 추후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오펜리아로 인해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낮동안 태양이 유독 새빨간 색으로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태풍이 남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던 공기와 먼지를 영국 쪽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영국 기상청의 그레이엄 매지 예보관은 "사하라 사막 먼지를 품은 남쪽 공기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산불에 따른 연기 입자를 함유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히로 인해 햇빛이 흩어졌다"며 "일몰 때처럼 대기 중 입자들이 햇빛의 푸른빛 과정을 흐뜨러뜨리고 분산시키면서 붉은 빛이 더 많이 노출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랭이마을의 겨울준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다랭이 마을 인근 들녘에는 농부들이 겨울철 냉해 피해를 대비해 마늘이 심어진 논에 비닐을 씌우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朴정부, 특조위 조직적으로 감시·방해"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1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기관과 관련자들 명단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설립 단계부터 특조위 강제 해산까지 지속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면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기관은 ▲해수부 ▲청와대 ▲총리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KBS ▲MBC ▲특조위(당시 여당 추천 위원 및 파견직 공무원) 등이다.

해당 기관별 관련자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특조위 위원이었던 고영주 MBC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차기환 KBS 이사 등 34명과 성명 불상의 다수 국정원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부 인사는 조사 방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특검을 통한 강 제력을 가진 수사보완 추가수사 등 '진상조사'와 '기소'가 우선"이라며 "조속히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